
제4차 국가환경교육계획

[2026-2030]

2025. 12.



기후에너지환경부

목 차

I . 국가환경교육계획 개요	1
II . 제3차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성과 및 한계 ..	5
III . 환경교육 추진 여건 및 향후 방향	11
IV . 제4차 국가환경교육계획의 기본방향	15
V . 중점 추진과제	19
1. 환경교육 추진기반 강화	20
2. 학교 환경교육 전환	28
3. 사회 환경교육 내실화	38
4. 환경교육 협력체계 강화	49
VI . 재원 조달방안 및 추진주체	57

I

국가환경교육계획 개요

1. 수립 개요
2. 계획의 성격
3. 수립 경과

I. 국가환경교육계획 개요

1. 수립 개요

□ (법적근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2항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교육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4차 국가환경교육계획 개요

- (계획 기간) 2026년 ~ 2030년 (5개년)
- (수립 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교육위원회(공동위원장 : 차관, 민간위원)의 심의를 거쳐 수립
- (추진 체계)

기후에너지환경부		· 국가환경교육계획(안) 수립
환경교육위원회		· 국가환경교육계획(안) 심의 ·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과제별 주관기관		·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자체 추진실적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관별 추진실적 종합 및 이행상황 점검 · 필요시 계획의 수정·보완

2. 계획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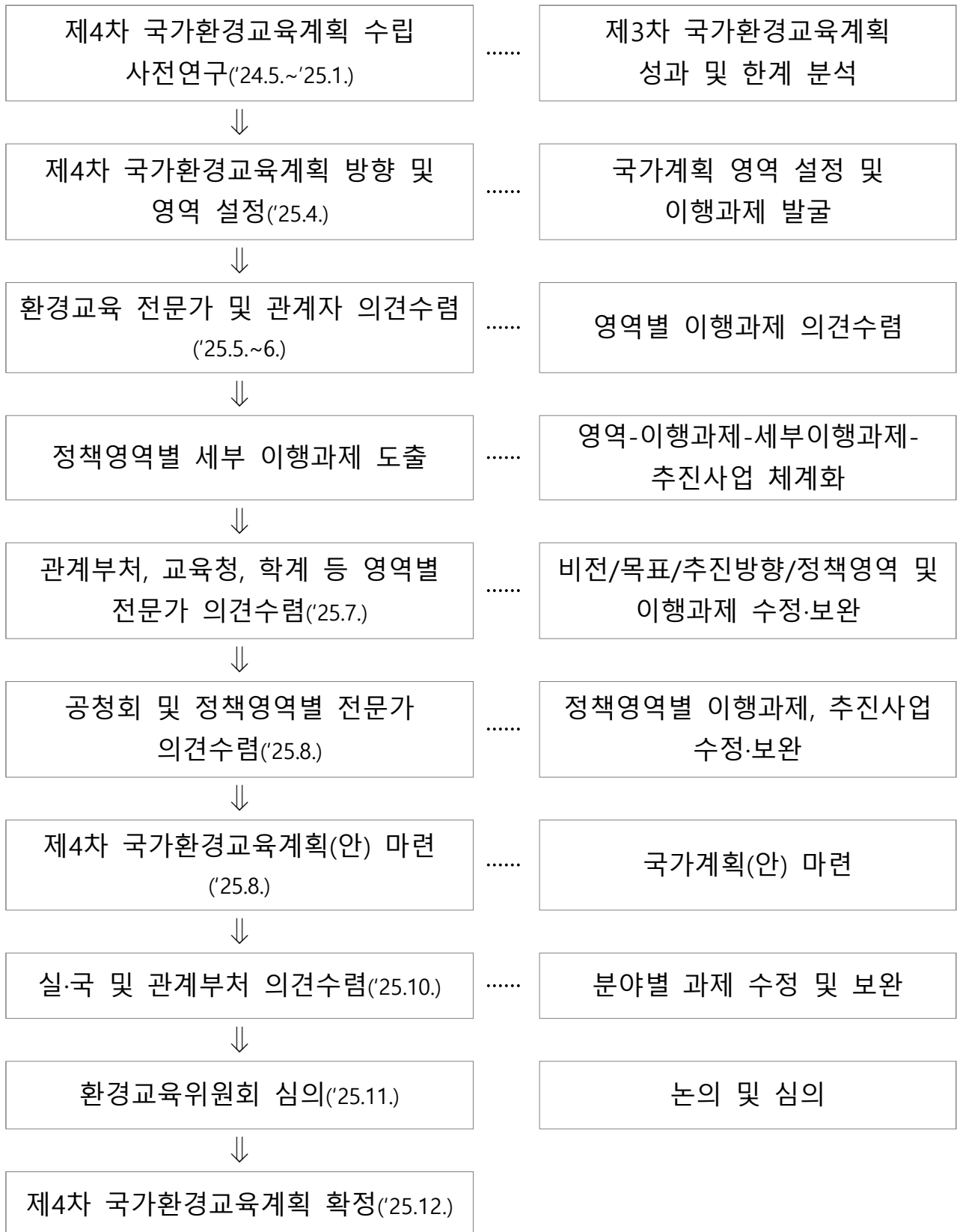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계획
 - 「환경교육진흥법」 제정 이전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근거한 비법정 계획인 “환경교육발전계획” 수립(’06)
 - 「환경교육진흥법」 제정(’08)으로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21)됨에 따라 “국가환경교육계획”으로 계획명 변경

※ 제3차 계획기간(’21 ~ ’25)이 만료됨에 따라 제4차 계획(’26 ~ ’30) 수립

- 기후위기 시대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전환을 위한 환경교육방향 제시
 - 환경학습*을 통한 모든 시민의 실천역량 강화 및 사회 전체로의 확산으로 녹색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미래사회 구현
 - * 학문적·일반적 개념으로 법정용어인 ‘환경교육’보다 넓게 사용되며 환경에 관한 인식, 이해, 행동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비형식적 학습 과정
 -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급격한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환경교육 방향 제시
 -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 기회와 접근성 확보 및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학교와 사회의 전환 추구
 - 학생, 교사, 시민의 기후행동 증진 및 실천 역량 강화, 미래사회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기후에너지환경교육 정착
 - 다층적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한 환경교육계획의 현장이행력 강화

-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
 - 국가 차원에서 환경교육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 세부 추진과제 제시
 -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한 평가체계 마련

3. 수립 경과



II

제3차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성과 및 한계

1. 환경교육 기반 구축
2.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 환경교육 강화
4. 환경교육 협력 확대

II. 제3차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성과 및 한계

제3차 국가환경교육계획('21~'25)

비전	환경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
목표	·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으로 모든 시민의 환경소양 함양 · 기후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환경교육 협력 체계 확립

분야	성과	한계
환경교육 기반 구축	· 국가환경교육센터 기능 및 역할 강화 · 국가 및 지역환경교육계획 이행 평가 도입 · 국가환경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 환경교육 실태조사 국가통계 승인	· 국가-지역 환경교육간 연계 미흡 · 국가환경교육센터 정책연구 및 통합적 관리기능 미흡 · 환경교육 콘텐츠 활용 부족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환경교육 강화 반영 · 지역 및 학교 현장에서의 환경교육 실행력 강화 · 교원 환경교육 연수 확대	· 학교-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 필요 · 학교급별, 지역별 교육 편차 발생
사회 환경교육 강화	· 환경교육사 제도개선 및 확대 · 환경교육사 인턴십 확대 ·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활성화	·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미흡 및 환경교육사 일자리 확대 한계 · 기후약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교육 접근성 부족
환경교육 협력 확대	· 범부처 유관기관 연계 협력 강화 · 기업과 ESG 기반 환경교육사업 추진 · 한중일 협력 지속 및 개도국 환경역량 강화 지원	· 민간분야 협력의 외연 확장 미흡 · 동아시아권 중심의 제한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

1. 환경교육 기반 구축

추진성과

□ 국가환경교육센터 기능 및 역할 강화

- 한국환경보전원(출연기관)의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23)으로 운영 안정성 확보
- 국가 수준의 환경교육 사업 기획·이행 및 환경교육 정보 관리 강화

□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계획의 이행평가 도입

- 국가 차원의 환경교육 실행계획 수립 및 연차별 이행평가 운영
- 광역 지자체의 지역 환경교육계획 이행평가 체계 도입·시행

□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확대 및 안정화

- '24년말 기준 광역 19개소, 기초 61개소로 지역 내 거점기관으로 정착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 국가 환경교육정보 통합제공 체계 및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이하, 통합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23.6.~'24.6.)

* 가입자 수 : 100,675명('24.12.기준) / 총 게시물 수 : 약 11,580건

- 환경교육 실태조사 국가통계 승인('24.8)

한계점

□ 국가환경교육센터 정책연구 및 통합적 관리 기능 미흡

- △ 환경교육 제도, 정책 사업 연구 강화 △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개별 부서, 소속·산하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교육사업의 통합적 관리 필요

□ 환경교육 현장에서의 콘텐츠 활용 부족

- 수요에 기반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현장 활용도 제고 필요

□ 환경교육 재원 확대 및 집행 효율성 개선 미진

- △ 국가와 지역 차원의 환경교육 재원 확보 노력 △ 한정된 예산 내에서 우선순위 설정과 사업 간 연계 수행을 통한 집행효율성 강화 필요

2.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성과

□ 학교 교육과정 체계 내 환경교육 기반 강화

- 「교육기본법」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생태전환교육 시책 수립·실시 의무 신설('21.)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후·생태환경 변화 대응 역량 강조
- 「환경교육법」 개정('22.3)으로 초·중등 학교장의 환경교육 실시 의무 규정

□ 지역 및 학교 현장에서의 환경교육 실행력 강화

- 전 교육청 환경교육 관련 조례 운용 및 계획 수립으로 지역단위 학교 현장 지원 강화, 교육청의 학교 환경교육 거점* 구축 확산
* 충북교육청환경교육센터 와우('22), 인천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23), 울산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23) 등
- 탄소중립학교 등 부처별 전문분야 협업을 통한 학교 환경교육 지원 강화
※ 중앙 단위의 탄소중립 중점학교('21~'23, 65개소)는 교육청 단위의 탄소중립 시범학교('21~'23, 774개소) 및 환경교육 선도학교('24, 611개소)로 지역화되어 발전
- 유아환경교육관 운영 확대(4개소) 및 에코스쿨(서울, 부산) 건립 추진

□ 교원의 환경교육 역량 강화 기회 확대

- 초·중·고 교원 연수 확대 및 온라인 연수 플랫폼 구축
※ 중앙교육연수원에 환경교육 직무연수 과정 개설(2개), 부처별 교원 연수과정 운영(기후부, 산림청, 기상청 등)
- 환경교육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21~) 및 학교 환경교육 연구대회 개최('25)

한계점

□ 학교-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 필요

- 지역 기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 정책과제 발굴 필요
- 지역 환경교육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실천형 교육 확대 요구

□ 학교·급별, 지역별 교육 편차 발생

- 환경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 역량 개발 및 전문성 신장 지원 필요
- 교육청별 학교 환경교육 계획 수립 지원 등 교육편차 최소화 방안 마련

3. 사회 환경교육 강화

추진성과

□ 사회환경교육 제도 기반 정비

-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제 도입 및 지정 가이드라인 마련
-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양성기관 및 자격취득자* 확산
* (누계) '21년 1,696명(2급 165명, 3급 1,531명) → '24년 3,171명(2급 367명, 3급 2,804명)
- 환경교육사 인턴십 운영으로 사회환경교육 인력 전문성 강화

□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활성화* 및 환경학습계좌제(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연계를 통해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증진과 환경교육 활성화 도모
* '25. 7. 1. 기준 유효 프로그램은 512개(지정기간 3년)
- 공무원, 군인, 종교인 등 다양한 사회주체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시민 환경학습 확대

- 통합플랫폼 내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기능 개선 및 수요자별 맞춤형 학습 콘텐츠 제공
* 교육·학습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①콘텐츠 제공 및 학습 운영, ②수강생 관리, ③평가 및 피드백 기능, ④커뮤니케이션 도구 등)
- 지역사회 중심 학습공동체 지원으로 환경 학습문화 조성

한계점

□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미흡 및 환경교육사 일자리 확대 한계

- 사회환경교육기관 활성화를 위한 제도 내실화 필요
- 환경교육사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 및 활동 기회 확대 요구

□ 기후약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교육 접근성 부족

- 기후피해의 불평등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교육체계 마련 필요
- 소외지역, 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환경교육 확장방안 마련

4. 환경교육 협력 확대

추진성과

□ 환경교육 유관기관 협업 강화

- 환경교육위원회 및 정책협의회를 통한 범부처 협력* 강화

* 6개 관계부처 협업(교육부, 기후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으로 탄소중립 중점학교 선정·지원

- 환경교육 업무협의회*를 통한 부처 내 협력 기반 구축

*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산하기관으로 협의회 구성·운영('21~, 반기별)

□ 사회환경교육 파트너십 확대

- 학교-사회 학습공동체 지원(~'24., 5건)

- 기업·종교·군부대·출판 등 다양한 분야와 협력 확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개 기업과 환경교육 협력 업무협약 체결('22년 9개, '24년 6개)

□ 국제 환경교육 네트워크 확장

- 한·중·일 환경교육 공동 사례연구 및 정책 협력 지속

- 개도국 환경역량 강화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아·태지역 국가 대상 기후적응 역량강화 교육 추진 등

한계점

□ 민간분야 협력의 외연 확장 미흡

- ESG 기반 협력사업 확대 및 실효성 있는 협업 방안 마련 필요

- 타 교육 분야(평생교육, 청소년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및 관련 분야(도서관 정책 등) 연계 환경교육 확장 필요

□ 국제협력에서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 미흡

- 동아시아권 중심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장 요구

- 녹색전환 정책과 연계한 주도적 국제 환경교육 협력강화 필요

III

환경교육 추진 여건 및 향후 방향

1. 국내·외 동향
2. 환경교육 정책 수요

III. 환경교육 추진 여건 및 향후 방향

1. 국내·외 동향

□ 기후행동과 변혁을 위한 기후·환경교육 강화

- (국외) 기후행동과 변혁에 대한 국제적 강조와 교육의 전환 촉구
 - ※ (UN) 변혁교육 정상회의('22), (유네스코) 녹색교육파트너십('22),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 권고('23), (OECD) 기후변화 맥락에서의 교육 제고('24),
- (국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기후·환경교육 강화 목소리 고조
 - ※ 기후위기 시대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25.8)

□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의 근간이 되는 환경교육 정책

- (국외) 글로벌 탄소중립 2.0시대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 지속 확대 추세
 - ※ (UN) 2030년까지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들의 동참 촉구
 - (EU) 기후중립 사회로의 전환 위한 국가적 노력 강조
 - (일본) 2050년까지 탈탄소 사회 실현 목표로 기후변화 대응책 추진
 - (대만)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환경교육 책임 명시(매년 4시간)
- (국내) 탄소중립·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2) 등 제정

□ 학교 전체적 접근*을 통한 학교 환경교육의 전환 추구

- * 교육과정, 학교 운영 및 시설관리, 환경친화적 문화조성, 지역사회 연계 등 지속가능성과 환경보전을 실천하는 통합적 접근방식
- (국외) 학교 전체가 참여하는 융합적 학교 환경교육 수행
 - ※ (EU) 기후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저탄소 교육에 대한 학교 프로젝트 시도,
 - (일본) 함께 바꾸는 지구의 미래: 탈탄소 사회 만들기 교재 및 동영상 제작·활용,
 - (중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탄소중립 교육 수행, (독일) 녹색 학교 인증제도 운영, 교과통합형 프로젝트 수업으로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환경교육 진행

- **(국내)** △환경교육 우수학교(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등을 중심으로 학교 차원의 환경교육 수행을 통해 양질의 교육과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 전체적 차원의 환경교육 우수 모델을 발굴하여 시·도교육청의 다양한 선도·실천 학교로 확산

※ (시·도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연구학교,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구학교 등 지정

□ 정의로운 전환과 평생학습 보장을 위한 사회환경교육 강화

- **(국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환경교육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및 기후 불평등 해소 기여

※ (덴마크) 국가 차원의 녹색 전환 기술 적극 지원, (독일) 노동조합이 국가 및 지역 에너지·기후 정책 준비 과정에 참여하고 전환 대비 교육에 참여, (핀란드)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직업 재교육 및 소득 보장 지원

- **(국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 환경교육사 양성,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등 시행

□ 환경교육 주체 간 다층적 협력체계 강화

- **(국외)** 관련 중앙부처, 연방-주정부 및 센터 등 민간 전문기관의 역할분담 및 협력

※ (미국) 환경청(EPA)-북미환경교육학회(NAAEE) 간 협력을 통해 연구에 기반한 환경정책 수립 및 수행

- **(국내)** 관련 중앙 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등), 지역(지자체-교육청-민간단체) 협력, 환경교육센터(국가-광역-기초) 협력 체계 마련

<참고> 국가별 환경교육 현황

- ▷ (미국) 1970년 환경교육법 제정, EPA(환경보호청) 내 전담 기구(OEE) 설치
- ▷ (캐나다) 교육과정 SDGs 반영,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전략 수립
- ▷ (일본) 문부과학성-환경성 공동 환경교육 진흥 정책 수립, 에코스쿨 운영
- ▷ (중국) 제14차 5개년 생태환경보호계획('21-'25) 중 환경교육을 생태문명 건설의 핵심 및 생태환경정책의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
- ▷ (대만) 2030 지속가능발전전략 내 환경교육 항목 반영, 직장인 환경교육 책임 명시

2. 환경교육 정책 수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25.10월)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을 포괄하는 통합적·실천적 교육모델 개발 및 정착 필요
 -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전환, 쾌적한 환경 구현 등 융합교육 추진
 -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기후행동 및 탄소중립 이행에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실천성 강화
 - 학생, 교사, 시민이 환경학습을 통해 기후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및 역량 강화 방안 마련
- 환경교육센터 시스템 구축 확산 및 연계 강화 필요
 - 국가-광역-기초 환경교육센터 연계 강화로 환경교육 저변 확대
 - 지역환경교육센터 체계적 지원으로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 학교와 사회의 전환을 위한 환경교육의 주류화 필요
 - 학교 전체적 접근을 통한 학교 환경교육 강화 및 주류화
 - 환경교육도시 및 평생학습체계와 연계한 환경교육의 일상화 지원
-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및 안정적 활동 지원 요구
 -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및 고도화 통해 전문인력 역량 강화
 -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시설의 의무 고용 확장 방안 마련
- 다층적 환경교육 협력 강화 필요
 - 학교-사회 수요 맞춤형 환경교육 브릿지 사업 발굴 및 전문가 양성
 -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교류·협력 확대 방안 마련

IV

제4차 국가환경교육계획의 기본방향

1. 정책 방향의 변화
2. 제4차 국가계획의 추진체계 및 목표

Ⅳ. 제4차 국가계획의 기본방향

1. 정책 방향의 변화

	제1차 환경교육종합계획 (‘11~’15)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 (‘16~’20)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 (‘21~’25)	제4차 국가환경교육계획 (‘26~’30)
환경 교육 기반 구축	· 제도기반 마련 · 포털사이트 및 DB구축	· 환경교육 제도운영 내실화 · 사업 모니터링 강화	· 환경교육체계 고도화 · 계획의 이행체계 확보 · 환경·사회·기술 변화 대응	· 환경교육체계 개선 및 활성화 · 환경교육계획 이행지원 및 환경교육정보 통합 · 국가 환경교육의 안정적 추진 기반 확보
학교 환경 교육 활성화	· 청소년 유아 대학생 교원 환경교육 강화	· 학교제도를 고려한 환경교육 · 교사 전문성 강화	· 학교체계 내 접목을 강화한 환경교육 · 교육청·학교 환경교육 실행 지원 · 교원 연수 기회 확대	· 학교 전체적 접근을 통한 생태전환교육 실천력 강화 · 교육공동체 환경교육 역량 강화 지원
사회 환경 교육 강화	· 군부대, 주부, 공무원 환경교육 활성화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제도 도입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제도 정착 · 언론, 종교 등 대상 다변화 · 지역기반 활성화	· 사회환경교육 기반 강화 · 인력 전문성 제고 ·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시민 환경학습 강화	· 환경시민의 참여와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역량 강화 지원 · 사회환경교육제도 개편을 통한 전문인력 역량 강화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도시 전체적 접근 지원
환경 교육 협력 확대	· 환경교육진흥위원회 구성 · 한·중·일 국제협력	· 범부처 협력 · 학교, 교육청 협력 · 민·관 협력 · 개도국 지원 확대	· 범부처·환경부·지역협력 확대 · 학교·사회·민간협력 강화 · 한·중·일 네트워크 협력분야 확대	· 환경교육 협력 체계화 · 민간분야 환경교육 협력 활성화 · 글로벌 파트너십 기반 환경교육 네트워크 강화

2. 제4차 국가계획의 추진체계 및 목표

□ 추진체계

비전

변화를 주도하는 환경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전략 목표

1. 모든 시민이 누리는 환경교육 기회 확대
2. 환경학습을 통한 환경시민의 실천 역량 강화
3. 사회 전체가 함께하는 탄소중립과 생태전환 구현

4대 추진전략

중점 추진 과제

① 환경교육 추진 기반 강화

- ①-1 환경교육 체계 개선 및 활성화
- ①-2 환경교육계획 이행 지원 및 환경교육정보 통합
- ①-3 국가 환경교육의 안정적 추진 기반 확보

② 학교 환경 교육 전환

- ②-1 학교 전체적 접근을 통한 생태전환교육 실천력 강화
- ②-2 교육공동체 환경교육 역량 강화 지원

③ 사회 환경 교육 내실화

- ③-1 환경시민의 참여와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역량 강화
- ③-2 사회환경교육제도 개편을 통한 전문인력 역량 강화
- ③-3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도시 전체적 접근 지원

④ 환경교육 협력체계 강화

- ④-1 범부처 환경교육 협력 체계화
- ④-2 민간분야 환경교육 협력 활성화
- ④-3 글로벌 파트너십 기반 환경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 추진목표

영역	추진목표	'26년	'30년
환경교육 추진 기반 강화	국가와 지역의 환경교육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및 활성화	국가 및 17개 광역시 환경교육 위원회 정기 개최 100%	연간 실행계획 및 이행평가 심의 100%
	환경교육 실태조사와 학교 환경교육 현황조사 체계화	조사항목 개선	조사체계 통합
	지역 환경교육센터 운영 활성화	광역시 100% 기초 70개소	광역시 100% 기초 100개소
	국가 환경교육 통합정보시스템의 체계화	17개 광역 지자체 연계	17개 시도 교육청 연계
학교 환경교육 전환	녹색생활 실천학교 추진과 지원	10개교	100개교
	대학의 그린리더십 교육과정 인증 지원	3개 대학	5개 대학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조성 확대	7개소	19개소
	교원 환경교육 연수 체계 구축과 운영	이수교원 55%	이수교원 70%
	교원 양성대학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지원	5개 대학	9개 대학
사회 환경교육 내실화	지역 환경문제 해결형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등 지원	10개	50개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운영체계 정비 및 프로그램 다양화	제도 정비	보수교육 프로그램 30개
	학교-사회 연계 환경교육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 및 지원	3개 지역	17개 지역
	환경교육도시 거버넌스 강화 및 지원	지정 및 평가 기준 보완	거버넌스 우수모델 5개소
환경교육 협력체계 강화	범부처 협력 메커니즘 구축 및 협업과제 발굴	1개	5개
	학교-사회 수요 맞춤형 환경교육 브릿지 사업 발굴	3개	17개
	기업 CSR 활동 연계 협력사업 발굴 및 우수사례집 발간	4개 기업	20개 기업
	TEEN 등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교류·협력 기회 확대	2개	10개



중점 추진 과제

1. 환경교육 추진 기반 강화
2. 학교 환경교육 전환
3. 사회 환경교육 내실화
4. 환경교육 협력체계 강화

V. 중점 추진 과제

전략 ① 환경교육 추진 기반 강화

①-1 환경교육 체계 개선 및 활성화

①-1-1. 환경교육 정책 수립 및 이행 체계 확립

현황 및 필요성

-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25.10.1)에 따른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위한 통합적 환경교육 체계 요구
 - 통합적 관점에서 기후·환경과 에너지를 이해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환경교육 체계를 개선·내재화 필요
- 국가 및 지역의 환경교육 거버넌스 운영 내실화 부족
 -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환경교육위원회를 통한 환경교육 정책 결정 및 계획 수립 심의 중이나 이행평가에 대한 심의는 다소 미흡
 - ※ (지자체 조례) 위원회 심의 사항에 연간 실행계획과 이행평가 등은 대부분 미반영
- 환경교육계획의 이행평가 사후관리 강화 필요
 - 환경교육계획의 이행평가 및 환류 체계가 마련되었으나, 공개되지 않아 환경교육 성과에 대한 정보 접근성 제한

추진 계획

- 통합적 기후에너지환경·생태전환교육 체계 마련 및 확산
 - 「환경교육법」 개정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생태전환교육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추진 기반 마련

- 「교육기본법」상 생태전환교육과 기후, 에너지를 포괄하여 개념 재정립, 기후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공동으로 국가환경교육계획 수립(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는 교육부장관이 총괄)
- 통합성을 다루는 개념적 틀로서 빅히스토리(Big-History)*, SDGs 등과 연계하기 위한 연구 수행(통합적 교육 추진방향 정립, 프로그램 개발 등)
 - * 빅뱅부터 현 인류 문명까지를 하나의 연결된 이야기로 보는 통합적 역사 서술
-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 강화 등을 포괄하는 교육모델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마련하여 녹색 사회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
 - ※ ‘탈탄소 녹색문명’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안내하는 교육교재 개발, 시범적용 후 전국확대 추진
- 단계적으로, △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및 평가체계에 반영, △ 사회 및 학교영역에서 시범사업 추진, △ 성과 분석을 통한 확산 추진

□ 거버넌스 기반의 환경교육정책 심의 기능 강화

- 연간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점검 등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해 거버넌스 기반의 기후에너지환경교육 체계 정립

□ 환경교육계획의 이행평가 및 환류체계 강화

- 환경교육계획 이행평가 시기, 방법, 사후관리 등 절차 구체화
 - * 자체평가→이행평가(평가위원)→평가결과 및 환류사항 환경교육위원회 심의 등
- 교육계획의 추진 실적 및 주요 평가 결과 등의 온라인 공개 추진

1-1-2. 체계적인 환경교육 조사 강화 및 결과 공유

현황 및 필요성

□ 환경교육 실태조사 결과의 정책 활용도 제고 필요

- 제도 시행 기반 마련 후 국가 통계 승인을 획득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범위와 방식, 문항 개선 등 체계화 미흡

□ 학교 환경교육 현황 조사의 실태조사로의 통합 고려

- 교육부 주관으로 학교 환경교육 현황 조사가 실시 중이나 실태조사와의 중복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두 조사의 통합 필요

추진 계획

□ 환경교육 실태조사와 학교 환경교육 현황조사의 통합 실시

- 조사 범위 확대(사회환경교육기관 등), 조사 체계(전수조사, 표본조사) 등을 포함한 환경교육 실태조사 시스템 개선

- △(단기) 실태조사와 현황조사 간 통합 추진, △(중장기) 교육 기관·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 실시(법적근거 마련 및 시스템 구축 등)

- 유사한 두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고, 환경교육 정책 목표와 이행과제의 현장 실행력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환류*하는 근거로 활용

- * 실태조사에 설문 항목을 포함하여 환경교육 관련 인식 개선 등 환경교육 운영 실태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정책방향 수립 및 사업 추진

- ※ 해양환경교육 실태조사(해수부 주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시하고, 향후 환경교육 실태조사와 단계적으로 통합 추진

□ 국가 환경교육 현황의 주기적 공개 체계 확보

- 환경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국가통계포털(KOSIS), 국가환경교육 통합 플랫폼 등 다양한 채널로 공개하여 직관적인 공유체계 마련

□ 기후에너지환경교육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강화

- (단기)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민환경의식조사”(KEI) 등 기존 환경 관련 조사시 기후에너지환경교육 부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교육 성과 확인 및 환류

- (중장기) 국민의 기후에너지환경교육 요구, 인식, 영향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체계를 구축(환경교육 실태조사에 포함 등)하여 정책 성과평가와 연계

1-2 환경교육계획 이행지원 및 환경교육정보 통합

1-2-1. 지역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현황 및 필요성

- 국가-지역계획 연계 강화를 위해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미흡
 - 국가환경교육계획과 지역환경교육계획 간 정합성 확보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과 차질없는 이행 지원 필요
- 지역 환경교육계획(지자체)-학교 환경교육계획(시·도교육청)간 연계 미흡
 - 「환경교육법」에 근거한 중장기 지역계획과 시·도교육청별 조례에 근거한 단년도 학교 교육계획과의 연계 및 정합성 제고 필요
-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체계적인 거점 역할 수행 지원 요구
 - 지역 내 기후에너지환경교육 유관기관을 아우르고 네트워크를 강화·확대시킬 수 있는 거점으로서 센터의 기능과 역할 확대 추세

추진 계획

- 환경교육법·조례·계획을 잇는 국가·지역 간의 연계성 강화
 -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토를 통해 국가 환경교육계획과의 정합성 확인 후 승인을 득하도록 관리체계 개선
 - * 해양환경교육분야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승인 필요
 - 기초지자체의 환경교육계획 수립을 권장 또는 지원하고, 계획 수립 의무화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30)
 -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의무화 시행('26.9)
 -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환경교육 조례 및 환경교육 계획 간 연계 강화로 학교-지역 환경교육 연계사업 활성화 유도

□ 기초지자체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거점화를 위한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 강화

- 계획 수립 컨설팅 지원 사업(국가, 광역계획과의 정합성 확인 등), 환경교육계획 표준모델 제공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 지역 환경교육센터가 지역 환경교육 거점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사업 등 지원

1-2-2. 국가와 지역의 기후에너지환경 교육정보 체계 통합

현황 및 필요성

□ 통합플랫폼 구축*에도 기후에너지환경 교육정보는 산발적으로 존재

- 타 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하나로 통합하는 체계가 부족하여 기후에너지환경교육 정보는 여전히 산재

* △환경교육 전문가 DB 761명, △환경교육 프로그램 559건, △환경교육 콘텐츠 3,844건, △환경교육 교구정보 104건, △우수환경도서 1,088건 등 보유

□ 국가 차원의 디지털 기후에너지환경학습 지원체계 부족

-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수업 및 학습에 관한 자료 요청을 지원하는 체계 미비

추진 계획

□ 국가 환경교육 통합플랫폼 운영 진단 및 개선

- 다양한 기후에너지환경교육 주체, 정책 사업, 주제별로 구분하여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통합플랫폼 내에서 쌍방향 의사소통* 체계 지원

* 시·도별 지역센터, 시·도교육청 등이 교육자료, 프로그램, 소식 등을 자체 홍보하거나 공유

- 교육자가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손쉽게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교육과정 연계 검색 시스템 구축, UI 개선, AI 챗봇 등)

※ 해양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 내 AI 튜터 등의 단계적 도입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소속·산하기관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API* 기능 구축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다른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플랫폼의 기능이나 데이터를 자동으로 연결·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

□ 기후에너지환경 교육정보의 통합과 연계 강화

- (단기) 타 기관*의 기후에너지환경 교육정보를 통합플랫폼과 연계

* △해양환경교육(해양수산부), △숲교육(산림청), △탄소중립교육(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지속가능발전교육(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 (중·장기) 기후부 소관 다양한 분야(기후, 대기, 물, 자연, 생태, 토양, 미세먼지, 화학물질, 에너지 등)의 교육 정보에 대한 효율적 통합방안 마련

1-3 국가 환경교육의 안정적 추진 기반 확보

현황 및 필요성

□ 국가단위 기후에너지환경교육 전문기관의 부재

- 한국환경보전원이 출범('23)하여 국가환경교육센터로 지정·운영 중이나 통합적 환경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 운영 필요
- 차기 국가 교육과정, 유아교육과정 개정 시 기후에너지환경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연구 요구

□ 기후에너지환경교육 의무화 대상을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까지 확대 필요

- 기후·환경재난이 일상화·대형화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환경 소양 함양과 기후위기 문제해결 역량 강화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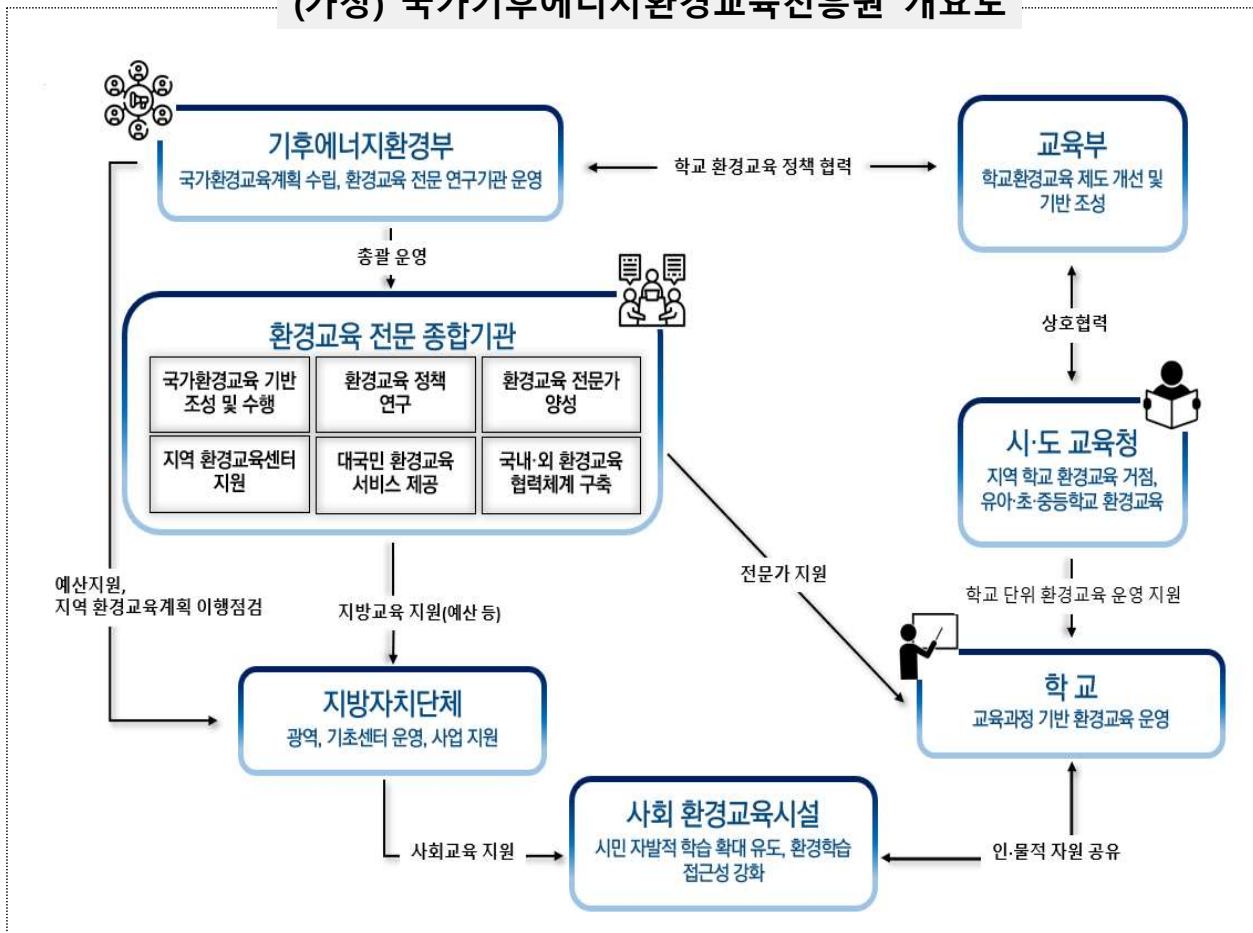
추진 계획

□ 국가 수준의 기후에너지환경교육 전문기관 설립

- 기후에너지환경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 국가기후에너지환경교육진흥원’ 등 전문기관 설립 추진
 -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연구* 및 조사,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 지역 센터 지원, 협력체계 구축, 교육 정보화, 전문가 교육 지원 등 역할 수행
- * △ 연구 체계화를 위한 장기 로드맵 구축 및 이행방안 △ 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 지역 특성화 전략 및 교육네트워크 연계·협력 방안 마련 △ 학습 교재·프로그램 개발 방향 및 전략 연구 등
- 차기 국가 교육과정 개발과 연계하여 교육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동 연구 추진으로 인간상, 교과 운영, 주제, 내용, 방식 등에 대한 방향 확립

- ※ (국내사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교육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문화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성평등부) 등 해당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운영 중
- ※ (해외사례) 미국은 국가환경교육재단(NEEF)을 설립해 환경보호청(EPA)이 주관하는 국가단위 환경교육 사업을 지원

(가칭) 국가기후에너지환경교육진흥원 개요도



□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대상 기후에너지환경교육 의무화 방안 추진

- 타 의무교육 사례*를 검토 후 교육시간, 교육내용·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시행(법률개정 필요, 인사처 협업)

* 장애인 인식개선, 성인지, 자살예방, 가정폭력, 부패방지, 통일교육 등

전략 2 학교 환경교육 전환

2-1 학교 전체적 접근을 통한 생태전환교육 실천력 강화

2-1-1. 환경교육의 확장 및 체계화

현황 및 필요성

- 생태전환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지원체계 구축 필요
 - 환경교육에 생태전환교육*을 포괄하여 「교육기본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민주시민교육 등과 통합적 관점에서 융합적으로 실시 필요
 - * 기후변화와 환경재난 등에 대응하고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며,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모든 분야와 수준에서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교육
- 지역 거점을 통한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요구
 - 환경교육 우수학교 등 지역 학교 환경교육 거점 확대와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주도의 생태전환교육 모델 구축과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 유아 환경교육 기관에 대한 종합 지원 확대 필요
 - 기관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후에너지환경교육 운영 모델을 발굴·적용하여 실질적 이행과 질적 개선을 위한 종합 지원 필요

과제 추진 계획

- 생태전환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 환경교육이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하는 생태전환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환경교육법」 개정 추진
 - ※ (개정방향) ①기후에너지환경부-교육부 공동 소관으로 변경, ②생태전환교육을 포괄하도록 환경교육 개념 확장, ③학교장의 환경교육 실시 의무 규정을 고교 및 특수학교까지 확대하는 등 학교 환경교육 지원 기반 강화 등
 - 학교의 생태전환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가칭)학교 생태전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융합적 생태전환교육 지원 체계 마련

- 생태전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통합적 관점에서 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목표를 체계화하여 제공
 - ※ ('26)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학습목표(UNESCO)를 기반으로 생태전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연계를 위한 교육 가이드라인 마련→('27) (가칭) 시민교육 플랫폼,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 등을 통해 제공
- 미래세대인 학생이 기후위기 등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가칭)환경소양진단도구' 개발
 - ※ ('26)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등 국제 학생 역량평가 관련 조사 문항 등을 기초로 진단 문항 개발→('27) 타당도 분석 등을 위한 시범조사 추진→('28) 진단시스템 구축

□ 지역의 교육거점 구축 및 확산 지원

- 학교 환경교육 지원센터(교육청), 유아기후환경교육관 확대 및 도서관 등과의 협력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해당 기관이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
 - 유아기(만 3~5세) 대상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도의 기후 환경교육관(놀이 체험형 시설) 조성 확대('25. 4개소 → '30. 19개소)
 - (가칭)우수기후환경도서관 선정 등 도서관과 협력 강화, 지역 주도로 학교·사회 환경교육을 연결하는 에코스쿨* 본격 운영(서울·부산)
 - *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교육·연구·체험 등이 가능한 종합환경교육시설
- 환경교육 우수학교* 등 검증된 곳을 지역 학교 환경교육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대상 범위(초·중·고→유·초·중·고) 및 지정수 확대
 - 지역 단위의 환경교육 우수사례 설명회, 연수, 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
 - * 해수부장관의 해양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 권한 신설

□ 유아 환경교육 체계적 지원

- 유아기후환경교육관 확대 및 거점 역량 강화*를 동시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아환경학교** 전국 확대('25. 수도권·충북권→ '30. 전국)
 - * 유아기후환경교육관 담당자 역량 강화 지원, 유치원 교사 등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유아 환경교육에 필요한 교사연수+교육과정+교보재를 1년간 패키지로 지원

- 충북권 유아기후환경교육관(한국교원대 영유아연수원) 운영 모델의 분석, 유아학교 및 유아교육 교사학습공동체 활동 등 환경교육 추진 지원

2-1-2. 학교 전체적 접근을 통한 교육 실현

현황 및 필요성

□ 환경교육의 학교 전체적 접근 확산 추세

- 교실에 국한된 교육이 아니라 학교 전체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수적인 행태 변화와 실천 내실화 필요

□ 학교 생태전환 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

- 학교 시설을 비롯한 학교운영 방식, 교육과정, 교사 역량강화, 지역 사회 연계 등 통합적 지원을 통한 학교 생태전환 문화 정착 요구

추진 계획

□ 교육과정 내 생태전환 교육 강화

-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생태전환교육 내용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제공하여, 교과 융합형 생태전환 교육과정 설계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 (‘26) 생태전환 교육내용 요소 분석 맵 개발 →(‘27) 국가환경교육 플랫폼내 검색·활용 서비스 개발
- 교육과정 내 생태전환교육 개정요소 등을 발굴하여,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업하여 차기 교육과정 개정방안 마련

□ 생태적 관점의 학교문화 조성

- 학교의 모든 영역에서 생태전환 교육의 가치와 원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한국형 생태전환학교 프레임워크’ 개발·보급
 - ※ (‘26)유네스코의 녹색교육파트너십(GEP), 환경재단의 ‘에코 스쿨’ 등과 협력하여 한국형 생태전환학교 프레임워크 도출→(‘27)한국형 생태전환학교 운영 지침서 개발→(‘28)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특화된 형태로 운영 지원
- 학교 구성원의 녹색전환 가치관 형성, 탄소배출 등 환경발자국 감축 실천과 교육 연계를 지원하는 녹색생활 실천학교 시범사업 추진

- 기후 시민 양성^①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학교^②를 시범사업^③을 거쳐 실행 매뉴얼을 개발하고 전국 확대 추진
- 학교 내 태양광 시설 확충하여 기후에너지환경교육과 연계하고, 학교를 에너지·물 사용 절감, 자원순환, 에너지전환 등 실습장으로 활용

녹색생활 실천학교 시범사업

- ①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소양과 역량을 갖추고 실천하는 사람
- ② 급식 등 학교생활 전반에 있어 에너지, 물,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을 덜 발생시키며, 생물다양성 보전과 순환경제를 실험하고 실천하는 학교
- ③ 학교 구성원 전체가 학교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하도록 학교별로 온실가스, 환경 발자국 진단, 감축전략 수립, 구성원 교육, 실적 작성 등에 대한 전문적 지원

□ 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학교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별 우수 프로그램 발굴·확산하고, 방학맞이 지역별 학생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격오지 학교 등에 교보재 및 우수환경도서를 지원하고, 민-관 협력 소외지역 학생 대상 찾아가는 기후에너지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 토양지하수 어린이 캠프, 푸름이이동환경교실(민간협력), 해양환경이동교실 등

2-1-3. 대학 환경교육의 활성화

현황 및 필요성

□ 대학에서의 기후에너지환경교육 확산 필요

- 대학 환경교육 지원을 위한 그린리더십 교과과정 인증 지원사업이 추진(서울대·고려대·수원대) 중이나 참여 대학 확대 필요

□ 기후에너지환경교육의 현장 연계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 요구

- 환경 분야 인턴십 관련 학생과 기관간 수요 매칭 지원 필요. 특히, 녹색 전환 관련 신사업 분야의 전문기관 발굴과 연계 강화 요구

□ 지역에서 대학의 기후에너지환경교육 분야 역할 강화 요구

- 대학의 지속가능성 추구가 강조되는데 비해, 지역사회의 기후에너지 환경문제 해결과 관련 교육에 기여도 증대 필요

추진 계획

□ 기후시민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지원

- 학과 간 벽을 허무는 환경 분야 교육과정인 그린리더십 운영 지원 강화

그린리더십 교과과정 운영

- ① 전공에 구애받지 않고 기후대응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인턴십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학 총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공동 명의로 인증서 발급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기관 등 다양한 환경 분야 기관에서 인턴십 기회 부여
- ③ 그린리더십 교육과정 운영 대학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학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졸업생의 국제교류와 사회공헌 기회 부여 등 다각도 논의

- 기후위기에 대한 인문학적 해법 발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인문 사회 융합인재 양성사업* 지속

* 환경 분야 컨소시엄에 5개 대학 참여(국민대^{주관}, 덕성여대, 울산대, 인하대, 조선대)

□ 지역 대학의 기후에너지환경교육 거점 역할 강화

- 연구실 등을 활용한 실험 중심의 기후에너지환경교육 제공과 대학생 멘토링을 통한 초·중·고 학생 대상 환경 행동 프로그램 지원(지자체, 교육청)

(예시) 지역-대학 협력

- 인천시교육청과 인하대는 고교학점제 과목 개설 등 환경교육 협력
- 단국대 대학생 환경교육단은 용인시 초중고 청소년 대상 환경교육 실시 등
- 해양대, 부경대 등 해양 인접 지역의 대학생과 해양연구소, 해양박물관 등의 전문가가 함께 청소년 해양환경캠프 등을 통해 해양환경 지식나눔활동 전개

□ 대학-산업현장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중개 지원

- 환경 분야 인턴십 관련 학생과 현장 간 실습수요 매칭을 위한 중개 지원 및 안내 강화

※ 환경 전공생 진로탐방교육(인재개발원), 고용기금 연계 인턴십 포함 환경 분야 직무교육(온실가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다양한 정부지원사업 안내

2-2 교육공동체 환경교육 역량 강화 지원

2-2-1. 교원 역량제고 및 실천활동 지원

현황 및 필요성

□ 예비 교원의 환경수업 전문성 강화 요구

- 범교과 학습주제와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전체적 접근 등을 위해 환경교과 뿐만 아니라 모든 교원이 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 전문성을 갖추 필요
- 환경교원 양성대학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과정 개발과 학교 교사들의 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교원의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역량 함양 기회 확대 요구

- 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내실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 지원과 함께 주체적 참여 촉진 기제 필요
※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 교원 연수 개설 수요 조사 결과 교실수업 혁신(1,018명)에 이어 기후위기·환경교육(997명)이 2위로 응답
- 다양한 연수 수요, 환경교육 경력 등 단계별 내용 구성과 교육시간 등 전반적인 체계를 마련하여 연수시스템에 반영할 필요
※ 양적(교원수) 확대와 함께 심화연수와 같은 질적 제고도 병행할 필요

□ 교원의 공동 학습과 실행 연구 및 실천성 확보 노력 확대 필요

- 현장 기반 교육 사례 축적과 확산을 위한 실행 연구 촉진과 교원 개인의 주도성을 넘어 집단적 주도성 강화 지원 필요

추진 계획

□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 '교원양성대학 환경교양과목 개설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예비교원의 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 역량 강화
※ 교원양성대학 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초·중등교원에서 유치원교원 양성 과정까지 확대

- 학교 환경교육 연구대회 개최, 실천연구회 운영 지원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생태전환 교육 활동 확산 지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의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심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원 연수 협력체계 구축
 - ※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원 대상 해양환경 관련 맞춤형 연수체계를 구축하고, 직무연수 등 확대

□ 생태전환 선도교원 양성 및 전문 네트워크 구축

- 시·도교육청별 환경교육 선도·실천학교 소속 교원 및 학교 환경교육 연구대회 입상 교사 대상으로 선도교원 양성과정 운영
 - 선도교원 네트워크 및 멘토단 구성, 선도교원 중심 학교-지역 연계 환경교육 코디네이터 활동 지원 등
- 선도교원 대상 한·중·일 환경교육네트워크(TEEN)* 참여를 통한 국제교류 기회 확대 및 우수사례 확산

* Tripartite Environmental Education Network

□ 교원의 통합적 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 역량 강화 지원

-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천하는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SDGs·생태전환·탄소중립·에너지전환 등 교원의 통합적 역량 강화
 - 통합적 개념으로 접근한 학교 교수·학습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운영 후 교원 대상 직무연수 과정 개설 추진

* 초안 개발(기후부 주관), 환경담당 교사 검증 후 교육청 인정 추진

2-2-2. 참여·실천 중심 학생 교육활동 지원

현황 및 필요성

□ 기후 적응, 회복탄력성 등 전환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강화 필요

-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지식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실천력 등 통합적인 소양과 역량을 갖게 하는 교육 요구

□ 학생의 교육 수요와 배경에 따른 학습 선택권 보장 필요

- 사회·경제적 취약 그룹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 이동권 보장, 비용 지원 등 다각도의 선택권 제공 필요
- 학교 밖 학습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관련 시설의 견학 및 체험을 통해 현장 중심의 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요구

추진 계획

□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 자유학기제·창의적체험활동, 학교자율시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등 생태융합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학생 참여 프로젝트 활동 지원
 - *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조사·탐구-해결방안 도출-실천으로 이어지는 학생 주도 프로젝트 기반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 기후부 우수동아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학생 실천 탐구대회를 개최·운영하고, 교사·전문가 환류 기반의 학생 성장 지원형 평가 시행
- 학교 내 관련 동아리의 지역 환경·에너지 체험과 문제해결 학습 지원
 - 기후부 소속·산하기관의 환경교육 전문가를 활용하여 학생 연구 프로젝트 및 동아리 멘토링 진행, 민간 전문가와 협업한 교육 지원

□ 학습 주제의 다양성 제고 및 맞춤형 교육 지원

- 빅히스토리(Big-History),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그린워싱 예방·녹색소비, 에너지 전환·합리적 이용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13세 이하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지원하고, 고교 및 대학교 현장학습 실습생 대상 환경보건·안전교육 지원
 - * 저소득층, 미취학 아동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환경성질환 가족캠프 운영 등

- 지역 특성을 감안해 학교 내 교육과 연계 가능한 지역기반 우수 교육 프로그램 발굴, 공유회 등을 통해 우수한 체험·실천교육 확산
 - ※ 공공 및 학교 도서관, 환경교육 우수학교, 교사학습공동체 성과물 등 지역 기반 우수사례 발굴
- 특수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2-2-3. 청소년 기후에너지환경 활동 네트워크 지원

현황 및 필요성

- 기후변화 당사자들의 의사결정 참여 역량 지원 확대 요구
 - 기후 소송에서도 나타났듯이 청소년들과 다른 세대 간의 연대와 협력, 수평적 의사소통이 강조되는 추세
 - 국외에서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정책을 제안하고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사례도 존재(스웨덴 칼스타드 지역의 청소년 의회 등)
- 학생들의 환경·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교류와 협력 확대 추세
 - 기후위기는 국제적인 거대담론으로 청소년·청년들의 국제적인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

과제 추진 계획

- 청(소)년 기후·에너지·환경 거버넌스 참여역량 강화
 - 기후·에너지·환경 활동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 청(소)년 및 대학생으로 구성된 기후에너지환경회의를 운영하고, 전국 포럼 개최
 - 학생 및 동아리 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주간 등을 활용한 발표대회 개최, 해양환경이슈 관련 토론회 및 해양올림픽아드 개최

□ 청(소)년 국제교류 및 글로벌연대 강화 지원

-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병행하여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교류 확대 및 환경리더 발굴을 위한 한·중·일 청년포럼(TEMM Youth Forum) 지원
 - *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 실천 사례 공유, 토의 및 토론, 한·중·일 공동합의 청년 포럼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촉진
 - ※ 그간의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청년 포럼을 청소년 대상으로까지 확대 검토
- 기후위기 현황 공유, 상호학습, 공동 대응을 위하여 청(소)년 대상 온·오프라인 국제교류 사업* 지원
 - * SDGs 및 환경 분야 등 국가 간 청소년 교류사업(성평등가족부) 등

전략 ③ 사회 환경교육 내실화

③-1 환경시민의 참여와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역량 강화

③-1-1. 지역 및 일상기반·시민주도 환경학습 강화

현황 및 필요성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 학습 유도 노력

- 제3차 국가환경교육계획 이행 기간('21.~'25.) 동안 지역환경교육센터와 연계한 시민 학습공동체* 지원 등 추진

* 전국 총 57개소 운영('21년 8개소, '22년 6개소, '23년 44개소, '24년 3개소)

□ 지역 내 사업·행사가 여전히 전문가 주도로 기획, 시민 주도성 미흡

- 기획부터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책무성을 강조하게 되는 실천·해결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개발 필요

과제 추진 계획

□ 지역 환경학습 모임 다각화로 역량 강화 및 지역중심 교육 구현

- 지역 환경문제 해결, 탄소중립 실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 기후에너지환경 리빙랩 사업 공모 및 지원
 - 지역센터, 대학 등 전문기관과 매칭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기후에너지 환경학습 모임 발굴 및 운영 지원, 학습결과 우수사례 확산
- 시민 기후환경 동아리·과학모임, 시민회의 등 학습모임 형태 다각화
 - ※ (해양분야) 어업인 및 해양레저 이용자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하고, 교육을 토대로 해변정화활동 등 해양환경 개선활동 지원 추진

□ 지역 기후에너지환경문제 해결형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 지원

- 탄소중립, 지역 내 에너지 사용, 자원순환 문제 등 구체적인 지역 기후 에너지환경 현안 중심 프로그램으로 설계
- 기후에너지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외 마을, 소모임 등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 확대

3-1-2. 소외 없는 환경학습 접근성 강화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교육 강화

현황 및 필요성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기후약자의 기후환경학습 부족 우려 및 환경권 훼손

- 기후약자가 당면하는 환경문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의 기후환경학습 고려

※ 환경교육 접근성을 높이며 스스로 환경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학습 기회 보장, 기후약자의 기후회복탄력성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환경학습 필요

- 일괄적인 기후환경교육 적용이 아닌 대상별 특성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운영 필요

□ 기후위기·환경재난 환경교육 강화 필요

-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쉽게 접근 가능한 기후재난 위험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확대 필요
- 기후위기와 환경·기후 재난 대응 학습 대상, 형식, 장소의 다양화와 일상화를 통해 비학령 인구 및 여러 직군이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장(場) 마련 필요

추진 계획

□ 국가 복지전달체계와 연계한 기후환경교육 협력 구축

- 기후부 환경복지사업(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등), 보건복지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복지전달체계* 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으로 2017년부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읍면동 3,426개소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완료

※ △서비스 제공자 역량 함양 교육, △방문 동행을 통한 맞춤형 현장 교육 등 추진

□ 소외지역 및 다문화 기후에너지환경교육 지원 강화

- 인구소멸지역, 농어촌, 도서지역 등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기후에너지 환경교육 서비스, 팝업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는 푸름이이동환경교실(민간협력) 지역 확장 및 찾아가는 해양환경이동교실 확대

- 다양한 언어 번역, 다문화 학습 자료 제작 및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가정*,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등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보급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성평등가족부 사업)와의 협력을 통한 환경학습 협력체계 구축

- 광역 및 기초환경교육센터와 기업 사회공헌 사업 연계를 통한 소외지역 기후에너지환경교육 운영 및 지원 활성화

□ 기후위기·환경재난 대응 기후환경교육 강화

- 기후약자의 대상별 특성과 학습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기후회복탄력성 증진

- 환경재난을 대비하고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후 환경교육과 안전교육을 연계 운영하여 재난 대응력 강화

※ 지역별 환경재난 모니터링, 커뮤니티 맵핑 등 시민참여 방식(시민과학 등) 도입으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학습 콘텐츠 마련

3-2 사회환경교육 제도 개편을 통한 전문인력 역량 강화

3-2-1.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및 고도화

현황 및 필요성

- '22년, 「환경교육법」 개정 이후, 환경교육사 제도 운영중
 - 기존 사회환경지도사를 환경교육사로 변경하고, 자격제도의 틀과 내용을 체계화 (총 3,171명의 환경교육사 배출('25.1월 기준))
-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환경교육사의 실무역량 부족 지속 제기
 - 다양한 기후에너지환경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환경교육사의 실무역량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 진행 및 지속적인 개선 필요

추진 계획

-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고도화
 - 자격취득 체계 점검 및 국가 자격체계로서 개선점 발굴·고도화
 - ※ 국가가 위탁한 양성기관을 통해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평가한 후 자격을 부여하는 체계의 유효성 및 지속가능성 확인
 - 환경교육사 교육과정 개정 및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체계 마련
 - 통합적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사 양성과정, 평가체계에 빅히스토리(Big-History), SDGs, 에너지 전환 등 교육내용 반영
 -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해양환경분야 환경교육사 등 전문가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자 관리체계 개편
 - 환경교육사 정책 수립 및 적절한 인력 활용을 위해 환경교육사의 활동현황 등 주기적인 실태 파악을 위한 이력관리 활성화

-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환경교육사 역량강화 체계 강화 및 보수교육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위탁 근거 마련
 - 기후에너지환경정책·이슈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주기 단축 및 보수교육 형태 다양화*를 통한 맞춤형 역량강화 기회 확대
- * 양성기관에 국한한 보수교육 운영 방식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문기관 등 다양한 환경교육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선택권 확장

3-2-2.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직업훈련 지원

현황 및 필요성

□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직업훈련 기회 부족

- 현장 중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턴십 사업을 확대하고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실무 경험과 사업 효과성을 제고
- 다양한 기후에너지환경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하여 시민을 직접 대면하는 교육자들의 전문성과 직업역량 향상을 지원

추진 계획

□ 환경교육사 인턴십 사업 확대 운영 및 평가체계 마련

- 인턴십 대상, 기간, 운영방식을 다각화하여 운영조건에 맞는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기관 선정 및 환경교육사의 실무 현장 활용성 향상
 - 일반 고용 인턴십 뿐만이 아니라 지역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등에서의 강사활동 경력 기회 제공 등 다각화 시도
- 일자리 연계, 지역 환경교육 기여도 등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인턴십 사업의 환류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환경교육 전문가군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기후에너지환경교육 관련 활동을 하고 있거나 활동가능성이 높은 전문가군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숲해설사 등
-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외 기후에너지환경 소양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평생교육 관점에서의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 평생교육체계와 연계한 기후에너지환경교육 전문강좌 개설 및 운영
-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맞춤형 기후에너지환경교육 역량 강화 교육과정에 환경교육사를 매칭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

3-2-3. 사회환경교육 전문가의 안정적인 활동 지원

현황 및 필요성

□ 사회환경교육전문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 미흡

- 안정적인 활동 보장과 지속적인 환경교육 경험의 축적을 위해 민간 환경교육 기관, 시설, 단체의 운영 안정성과 활동 확장 필요

□ 학교-지역사회 연계 환경교육 요구 증대에 따른 전문인력 필요

-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강조되면서 학교-사회 연계 기후에너지 환경교육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과제 추진 계획

□ 학교-사회 연계 기후에너지환경교육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 및 지원

-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상호 간의 이해와 연결을 통해 양질의 기후에너지환경교육이 가능한 코디네이터* 양성

* 녹색생활 실천학교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코디네이터 역할 정립, 필요성 등 검토

※ (예시) 용인특례시는 ‘지구를 살리는 생태학교’ 사업으로 학교-사회 환경교육의 연계, 학교 환경교육 지원 방안으로 초·중·고교에 환경교육사를 파견하여 지원

- 담당 지역의 학교-사회 연계 기후에너지환경교육프로그램 및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지역상황에 적합한 협력 프로그램 마련

□ 국·공립 및 지자체 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 전문인력 의무 고용

- 사회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도시, 환경교육 우수학교 등 지정요건으로 환경교육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 마련
- 기후에너지환경교육 전문인력 지원이 필요한 기관*과 환경교육사 파견 가능성 및 운영 협의, 파견 지원

* 공공기관, 평생학습시설, 복지시설, 문화예술시설, 지자체 환경관련 시설 등

3-3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도시 전체적 접근 지원

3-3-1. 환경교육도시 지정 및 지원 확대

현황 및 필요성

- '20년 4개 지자체 시범지정 후 '24년까지 19개 지자체 지정
 - 제3차 국가환경교육계획 기간 중 환경교육도시 지정 목표(16개소) 차질 없이 달성, 환경교육도시를 신청하는 지자체가 매년 증가
- 환경교육도시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 및 시민 거버넌스 강화
 -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기반으로 한 도시 전반의 자발적 협력과 거버넌스 강화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

과제 추진 계획

- 환경교육도시 제도 개선 및 거버넌스 강화
 - 평가지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기반이 미흡한 지자체의 경우 성장 가능성, 조성 의지 등을 고려한 예비환경교육도시** 지정 제도 도입(컨설팅 등 지원 강화)
 - * 지역 환경교육 거점 운영 여부(환경교육사 양성기관, 환경교육 우수학교, 광역의 경우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등)에 대한 평가지표 신설 및 가점 확대
 - ** 지역 환경교육계획 마련현황 및 이행계획을 우선 평가하여 지정하되, 차년도에 실제 추진상황 등을 확인하여 환경교육도시 지정 여부 판단
 - 시민이 주도하여 환경교육도시의 이행 과제 발굴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거버넌스 우수 모델 발굴 및 포상
- 환경교육도시 지정 성과 및 효과성 평가 연구
 - 환경교육도시 지정 성과 및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량적, 정성적 평가틀* 개발
 - * 온실가스 감축량, 환경·에너지전환 인식개선도, 탄소중립 생활 실천률 등

- 환경교육도시 이행 및 성과평가를 통해 참여 도시들은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이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

□ 환경교육도시 국내 네트워크 구성 및 자기발전 지원

- 환경교육도시 간 상호 학습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국내 환경교육 도시간 교류 및 네트워크 마련(협의회 운영 등)

※ (예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전국문화도시협의회 운영 중

3-3-2. 평생학습으로서의 기후에너지환경학습 다양화

현황 및 필요성

□ 평생학습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학습의 접근성 부족

- 성인 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가까이 기후에너지환경교육을 접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등 학습 접근성 강화 요구
- 자원순환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다양한 기후에너지환경학습이 가능한 물리적 공간과 시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공간을 적극 활용할 필요

□ 사회변화를 직접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성인 기후에너지환경교육 확대

- 급증하는 노인인구까지 고려한 성인 및 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참여적이고 실천중심, 생활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확대 필요

추진 계획

□ 평생학습체계와 연계한 기후에너지환경교육 협력 강화

- 국가평생학습체계* 내 교육 강좌 개설 및 운영 현황 분석

*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정 학습과정,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등

- 온국민평생배움터(평생교육 종합플랫폼), KEI 환경정책교육원 내 학습 과정 연계 확장으로 시민 접근성 및 선택 다양성을 확대

※ 교양과정부터 전문과정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학습권 보장과 접근성 확보

□ 성인 및 노인 기후에너지환경교육 강화를 통해 사회 참여 활성화

- 학교 교육 이후 단절되는 성인 및 노인 대상 기후에너지환경교육 실태분석 및 성인 및 노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청년, 직장인, 중장년층, 노년층으로 이어지는 학습대상 특성과 학습 여건, 필요한 환경소양 등의 상황을 반영

□ 기후에너지환경학습 실행의 장 다양성 확보

- 기후에너지환경교육 관련 활동을 하는 유관기관의 환경학습 실행 공간* 및 실태 파악

* 자원순환센터,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복지관, 문화센터, 에너지교육센터 등

- 기후에너지환경교육 관련 활동 연계 가능성 모색 및 협력 지원방안 마련으로 환경학습 실행의 장 다양화

3-3-3. 사회환경교육기관 및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고도화

현황 및 필요성

□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체계화 필요

- 지자체 참여의지 고취, 사회환경교육 기관·단체들의 적극 참여를 위해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제도의 운영·관리 측면의 보완과 체계화 필요

□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정교화에 대한 요구

-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조건 완화, 재인증제도 개선, 지정기간 연장 등 지정제도의 품질제고와 정교화를 위한 개선 필요

추진 계획

□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제도 개선

- 지정제도 개선,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확대 및 체계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 및 지원 방안 마련

※ 지정권자인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한 공모사업, 맞춤형 컨설팅 등 지정을 받은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 마련

□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고도화

-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 내실화를 위한 연구('25)를 기반으로 지정기준 및 평가지표 보완, 발표대회 등 성과 확산 추진

※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형식 및 대상 다양화, 선정 절차 개선, 품질 제고를 위한 운영 현장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

전략 4 환경교육 협력체계 강화

4-1 범부처 환경교육 협력 체계화

4-1-1. 범부처 기후에너지환경교육 협력 메커니즘 구축

현황 및 필요성

□ 부처간 협업 역량 강화 및 협의체 운영 내실화 요구

- 기후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관계부처가 추진상황을 수시 공유하고 공동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의 장 필요
- 국가 차원의 정책과 연계한 통합 전략 수립과 공동 이행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협력 메커니즘 구축 요구

과제 추진 계획

□ 부처 간 기후에너지환경교육 협의체 운영 확대 및 정책 연계 강화

- 기존 학교 환경교육정책협의회(교육부-기후에너지환경부)의 운영현황 점검 및 성과분석을 통한 협의체 운영 실효성 제고
- 교육부, 해양수산부, 문체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림청, 기상청 등 타 부처와의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 성과의 공유 및 확산 체계 마련
 - ※ (유 관계 획)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교육부), 해양환경교육계획(해양수산부), 문화예술 교육 종합계획(문체부), 친환경농업 육성계획(농식품부), 산림교육 종합계획(산림청) 등

□ 범부처 협력 메커니즘 구축 및 탄소중립 협업과제 발굴

- 기후에너지환경교육 관계부처와 다자간 또는 양자간 협력을 통해 의제 발굴 및 정책 사업 제안, 공동 목표 설정 및 협력 이행 방안 마련
- 기후에너지환경교육 관계부처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업과제 발굴 추진
 -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국무조정실과의 SDGs 교육 협업 추진 등

4-1-2. 부처 내 기후에너지환경교육 협력체계 강화

현황 및 필요성

□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기후에너지환경교육 총괄 조정·관리 강화 필요

- 부처 내 기후에너지환경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후에너지환경교육 업무협의회’를 정책 조율을 통한 유기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킬 필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개별 사업부서, 소속·산하기관으로 구성·운영 반기별 환경 교육 사업 계획, 성과 공유('21~, 반기별)

□ 실효성 있는 협력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교육 자원 체계화 요구

- 분야별 특성에 따라 관련 교육이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어 교육 자원의 통합적 관리와 체계적인 활용 미흡

추진 계획

□ 부처 내 기후에너지환경교육 협력체계 고도화

- ‘기후에너지환경교육 전담부서’의 총괄 조정 역할 부여(조직개편, 인원보강) 및 이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의회* 위상 격상(직제 개정, 운영규정 마련 등)

* ‘기후에너지환경교육 업무협의회’ 논의 안건을 부서 및 기관별 실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책 환류 체계 구축으로 운영 내실화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의 전문가 및 축적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원 연수, 학생 연구프로젝트 및 기후에너지환경 동아리 자문, 교사 환경학습공동체 자문 등 실시

□ 부서·기관별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총괄부서의 검토·조정

- 국가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부서·기관별 기후에너지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총괄부서의 검토·조정을 통한 연간 교육계획 확정 및 이행
-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부처 내 기후에너지환경교육 관련 사업과 자원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

4-2 민간분야 환경교육 협력 활성화

4-2-1. 학교-지역사회 협력 실질화

현황 및 필요성

- 학교-사회 협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 미흡
 - 학교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지자체, 기업 등 협력 주체별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요구
- 학교-사회 협력모델 기반의 미래 대응형 협력체계 구축 필요
 - 학교-지자체 연계모델 및 교육청-지역 네트워크 중심 모델 등 구조적 협력 모델에 기반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추진 계획

- 수요 맞춤형 기후에너지환경교육 협력 사업 발굴 및 전문가 양성
 - 학생, 교원 등 학교의 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학교 맞춤형 협력 사업 기획·발굴
 - 학교-사회 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 사업을 추진하는 등 협력 사업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
- 학교-사회 협력모델 발굴 및 활성화 지원
 - 학교-단체, 학교-지자체, 교육청-지역 네트워크 등 협력의 주체와 범위를 다르게 접근하는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확산 지원
 - ※ (예시) 경남도교육청은 지역의 지리적 환경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단위의 환경교육 선도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교육 특구' 운영
 - 학교-사회 기후에너지환경교육 협력사업 조사 및 우수사례 발굴·지원
 - ※ (예시) 충북도교육청은 기업 ESG 협력사업으로 '모두를 위한 탄소정원 탄탄숲'을 운영하는 등 학교-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

4-2-2. 기업 및 타 교육 분야와의 협업 확대

현황 및 필요성

- **기후에너지환경교육의 외연 확장 요구를 반영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요구**
 - 기후에너지환경교육의 질적 확산을 위해서는 협력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선택과 집종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
 - 민·관·산·학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은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되거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등 지속성 확보에 한계
- **기존 교육 분야와의 연계 강화 미흡**
 - 기 구축된 인프라와 전문성을 보유한 평생교육, 청소년교육 분야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사회 전반으로의 확산 촉진 필요

추진 계획

- **기업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기후에너지환경교육 협력 강화**
 -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 등과의 협력 기반 마련으로 기업의 기후에너지환경교육 분야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 * (예시) ERT 다함께 나눔 프로젝트: ERT 회원사인 한화, 코오롱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지원 및 재생에너지 체험교육 등 실시('25.)
 - 기후에너지환경교육 선도기업과 업무협약(MOU) 체결 확대, 선도기업 간 협의체 운영, 임직원 대상 교육 지원 및 협력사업 발굴 추진
 - ※ (예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교보생명 등 15개 기업과 환경교육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환경교육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하고, 캠페인 추진 등으로 환경교육 활성화
 - 기업의 ESG* 경영 연계 기후에너지환경교육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사례집, 가이드라인(실행절차 및 전략 제시) 발간 *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 ※ ESG 경영 민간·공공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및 주기적 소통으로 차세대 해양교육 사업에 투자·후원 등 활성화 유도

□ 타 교육분야 연계 맞춤형 사업 발굴 추진

- △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지역환경교육센터 △ 국립청소년수련시설-국가환경교육센터 간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협력사업 추진
-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기후에너지환경교육 통합 모델 개발 및 공동 추진 기반 마련
 - ※ 환경교육사와 문화예술교육사 간 연계 방안 모색 및 공동프로그램 운영
- 우수환경도서관 선정 등을 통해 도서관의 지역 내 기후에너지환경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고, 우수환경도서 지원 등 협업 추진

4-2-3. 지역 단위 기후에너지환경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현황 및 필요성

- 지역 기후에너지환경현안 대응을 위한 지역 내 교육 네트워크 활용 부족
 - 지역 기후에너지환경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교육 네트워크와 연계한 협의체 구축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선행 필요
- 지역 기반 사업과 연계한 기후에너지환경교육 활성화 추진 미흡
 - 지역 기후에너지환경교육의 안정적,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지역발전 사업과의 연계 방안 적극 모색 요구
 - 지역 특화형 기후에너지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마을 공동체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역량과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

추진 계획

- 지역 기후에너지환경교육 협의체 구축·운영 지원
 -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지역 교육청 등 다자간, 양자간 기후에너지환경교육 정책협의체 구축·운영 지원

- 지역 특화형 기후에너지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협의체 간 상호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구축·지원
 - ※ 해양교육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해양교육발전협의회 등과 지역 맞춤형 콘텐츠 제작·보급 및 해양환경교육 협력

□ 지역 단위 정책사업 연계 기후에너지환경교육 협력사업 발굴·추진

- 국가 환경정책으로 추진되는 지역 단위 사업 및 지자체, 교육청의 협력사업과 기후에너지환경교육 연계 방안 모색
 - ※ (예시) 한국환경공단의 K-eco 지역 상생·발전 사업: 주민체감형 환경문제 해결 과제와 환경교육 통합 방안, 이를 통해 주민 인식 증진 및 지역 확산 효과 창출 가능

현황 및 필요성

□ 글로벌 파트너십에 기반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점점 강조

- 국제 개발협력 확장 추세* 속에서 환경교육 분야도 글로벌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고, 미래세대 참여를 확대할 필요

*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공동 주최한 제17회 서울ODA국제회의('24.9.4.)는 향후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을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에서 모색

□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맞는 글로벌 영향력 확대 요구

- 한·중·일 환경교육네트워크(TEEN)의 교류 수준을 넘어 기후에너지환경 교육 분야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소통 및 교류를 확대할 필요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 협력과 이를 통한 해외 일자리 창출,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 필요

□ 지역-국가-국제 기후에너지환경교육 네트워크의 연계·협력 강화 추세

-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 지역 단위에서 글로벌 의제를 반영한 환경 교육 실천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필요

* '24년 서울 국제기후환경포럼, '24년 세종 국제탄소중립포럼 등

** 람사르 습지도시 간 국제교류, 습지학교네트워크 운영 등

과제 추진 계획

□ TEEN 등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교류·협력 기회 확대

- 한·중·일 환경교육네트워크(TEEN)의 주도적 역할 수행 및 성과물의 국내·외 공유·확산, 공동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
 - 단순 교류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협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공동협력사업 성과물의 국내·외 활용방안 모색

□ 개도국의 기후에너지환경교육 ODA 사업 발굴 및 지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ODA 사업과 연계하여 개도국의 환경·기후변화, 에너지교육 관련 인재 초청 연수
 - 국내 우수사례 소개 및 국제협력 역량 강화, 수원국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 수원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지원
 - ※ (예시) 온실가스정보센터는 개도국 공무원,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과 공동 운영
 - 개발도상국 대상 전문적·체계적 해양 환경교육·훈련 등 제공
- 대학 등과 협력하여 아시아 등 지구촌 이웃 국가의 정의로운 전환에 기여*
 - * △그린리더십 교과과정을 통해 청년 등 다양한 세대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기여방안 발굴, 국제네트워크 등 활용 추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도 연계

□ 개도국 환경인력 초청연수 및 환경공무원 학위연수 내실화

-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환경 분야 국제연수와 연계하여 환경교육 관련 강좌 개설 추진 및 한중일 3국 공동 환경교육훈련 과정과 TEEN 연계 방안 모색
- 대학(서울시립대)과 연계 운영되는 환경협력국 공무원 학위연수 과정에 환경교육, 기후위기교육, ESD 등 관련 교육 강좌 개설 추진

□ 지역별 환경교육 국제교류·협력 사업 지원체계 구축

- 지자체, 시·도교육청의 기후에너지환경교육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기관* 지정
 - *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지역 거점 센터(RCE) 사례 참조
- 지역 연계형 국제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 △ 해외 자매도시간 △ 시·도교육청-해외 교육청 간 환경교육 교류

VI

재원 조달방안 및 추진 주체

1. 재원 조달방안
2. 추진 주체

Ⅵ. 자원 조달방안 및 추진 주체

1. 자원 조달방안

□ 기본 방향

-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근거하여 필요한 자원 마련
- 기관 간 상호협업·조정을 통해 환경교육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재정 조달방안

- 주체간 협력 확대로 소요재정 분담
 - 범부처, 지자체 간 환경교육 정책 연계성 강화로 재정 분담
 -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민간단체 사회환경교육 활동 등과 연계하여 주체별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재정 확보 추진

□ 제4차 국가계획 예산소요(추정)*

(단위: 백만원)

정책영역	총예산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1. 환경교육 기반	44,700	5,300	7,200	9,200	10,050	12,950
2. 학교 환경교육	28,890	5,220	5,470	5,900	6,100	6,200
3. 사회 환경교육	54,155	5,500	7,365	10,370	14,630	16,290
4. 환경교육 협력	24,745	3,557	6,477	4,887	4,887	4,937
총계	152,490	19,577	26,512	30,357	35,667	40,377

* 국가계획에 포함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교육 사업 예산(실·국, 산하·소속기관)을 종합

※ 투자 여부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연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협의

2. 추진 주체

영역별 추진 과제		추진 주체
1. 환경교육 추진 기반 강화		
1	1-1. 환경교육 정책 수립 및 이행 체계 확립	기후부, 교육부 협력, 해수부, 지자체, 시도교육청, 국가센터, 지역센터
	1-2. 체계적인 환경교육 조사 강화 및 결과 공유	기후부, 교육부 협력, 해수부, 국가센터
2	2-1. 지역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기후부, 교육부 협력, 해수부, 지자체, 시도교육청, 국가센터, 지역센터
	2-2. 국가와 지역의 환경교육정보 체계 통합	기후부, 교육부 협력, 해수부, 지자체, 시도교육청, 국가센터, 지역센터
3	국가 환경교육의 안정적 추진기반 확보	기후부, 교육부 협력, 해수부, 국가센터
2. 학교 환경교육 전환		
1	1-1. 환경교육의 확장 및 체계화	기후부, 교육부, 해수부, 시도교육청 협력
	1-2. 학교 전체적 접근을 통한 교육 실현	기후부, 교육부, 해수부, 시도교육청 협력
	1-3. 대학 환경교육의 활성화	기후부, 교육부, 해수부, 지자체·시도교육청 협력
2	2-1. 교원 역량제고 및 실천활동 지원	기후부, 교육부, 해수부, 시도교육청 협력
	2-2. 참여·실천 중심 학생 교육활동 지원	기후부, 교육부, 지자체·시도교육청 협력
	2-3. 청소년 기후에너지환경 활동 네트워크 지원	기후부, 해수부, 성평등부·시도교육청 협력
3. 사회 환경교육 내실화		
1	1-1. 지역 및 일상기반·시민주도 환경학습 강화	기후부, 해수부, 지자체, 지역센터
	1-2.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환경학습 접근성 강화	기후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성평등부 협력, 지자체, 지역센터
2	2-1.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및 고도화	기후부
	2-2.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직업훈련 지원	기후부, 해수부, 지자체
	2-3. 사회환경교육전문가의 안정적인 활동 지원	기후부, 교육부·문체부 협력, 지자체, 교육청, 지역센터
3	3-1. 환경교육도시 지정 및 지원 확대	기후부, 지자체, 시도교육청 협력
	3-2. 평생학습으로서의 환경학습 다양화	기후부, 교육부 협력, 지자체
	3-3. 사회환경교육기관 및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고도화	기후부, 지자체, 국가센터
4. 환경교육 협력체계 강화		
1	1-1. 범부처 환경교육 협력 메커니즘 구축	기후부, 관계부처, 정부위원회
	1-2. 부처 내 환경교육 협력체계 강화	기후부, 해수부, 소속·산하기관
2	2-1. 학교-지역사회의 협력 실질화	기후부, 해수부, 교육부 협력, 지자체, 교육청, 국가센터, 지역센터
	2-2. 기업 및 타 교육 분야와 협업 확대	기후부, 해수부, 교육부 협력, 성평등부, 문체부, 기업, 국가센터
	2-3. 지역 단위 환경교육 협력 활성화	기후부, 해수부, 지자체, 지방환경청, 교육청, 지역센터
3	글로벌 파트너십 기반 환경교육 네트워크 강화	기후부, 외교부, 해수부, 국가센터